

보도시점 4.1.(수) 석간 < 4.1.(수) 10:00 >

중기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 본격 가동

- 중기부 장관 「중동전쟁 소상공인 영향 점검」, 제1차관 「중기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점검회의」로 급변하는 중동전쟁 상황관련 업계 현장점검
- 플라스틱 원자재 대란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장 애로 청취하고, 정책 지원 및 상생 방안 등 종합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1(수)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중기부 중동전쟁 영향 점검 회의 개요 >

-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분야 영향 점검회의’ : ‘26. 4.1(수), 10:00 ~ 11:00
 - (참석)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배달앱 3사 관계자 등 15명 내외
 - (내용) 포장용기, 비닐 가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및 지원방안 논의
- 중기부 1차관 ‘중기부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 : ‘26. 4.1(수), 10:00 ~ 11:00
 - (참석) 중기부 본부 주요 부서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산하 공공기관 임원
 - (내용) 비상경제 대응체계 점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황별 대응방안 논의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전격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으로 타격이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 소매업 중심으로 경영 애로가 특히 크다고 호소하였으며, 배달 업계와 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는데, 이날 참석한 배달앱 업계 3사도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중소기업 업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및 ‘원자재,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애로이며, ‘유동성 지원’과 ‘물류비 지원 및 운송 인프라 확대’ 등 정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원가 상승분 분담을 위한 공급 대기업, 위탁기업, 배달플랫폼 등과의 상생방안도 검토하였으며, 수·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고유가 영향 업종 중심으로 납품단가 연동 약정 준수 여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내수 침체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업계-배달앱-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500)
		담당자	서기관	이화정 (044-204-7501)
			사무관	최영훈 (044-204-7502)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책임자	주무관	김희연 (044-204-7513)
			과 장	윤세명 (044-204-7820)
		담당자	서기관	유제환 (044-204-7867)
		사무관	조무근 (044-204-7823)	